

광 주 고 등 법 원

제 2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09나6829 약정금
원고, 항소인	주식회사 OOOOOO마트 목포시 OO동 ____-
	대표이사 이◇○
	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주
피고, 피항소인	주식회사 ▷♀♀♀♀
	전남 영암군 OO읍 OO리 ____-
	대표이사 김□■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, 담당변호사 나양명
제 1 심 판 결	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. 10. 13. 선고 2009가합193 판결
변 론 종 결	2010. 8. 25.
판 결 선 고	2010. 10. 13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8,545,7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 내지 5호증, 갑 제9 내지 16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당심 증인 김□△, 김♥◆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는 용접봉 및 용접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, 피고는 조선소로부터 발주받은 선박블록을 제작·조립하여 납품하는 회사이며, 소외 일♣☆☆은 피고의 공장내에서 피고로부터 수급받은 선박블록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회사이다.

나. 일♣☆☆은 2007. 2.경 피고의 공장내에서 피고로부터 수급받은 선박블록을 제작하기 시작하였고, 피고는 2007. 2.부터 2007. 4.까지 3개월간 일♣☆☆에서 필요로 하는 용접봉 및 소모자재 등을 원고에게 주문하여 일♣☆☆에게 공급하고, 그 대금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.

다. 원고는 2007. 5.경부터 피고를 통하지 않고 일♣☆☆에게 직접 용접봉 및 소모자재 등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, 원고가 2008. 4. 25.까지 일♣☆☆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은 총 203,589,534원(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주문한 2007. 2.부터 2007. 4.분을 포함한 금액임)이다.

라. 피고는 자신이 직접 주문하여 일♣☆☆에게 공급한 2007. 2.부터 2007. 4.분 물

품대금을 포함하여 2007. 12. 31.까지 일순☆☆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중 95,043,789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었다.

2.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원고는, 피고가 원고에게 일순☆☆의 피고에 대한 선박블록 제작대금에서 원고의 일순☆☆에 대한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고, 남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일순☆☆에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(이하에서는 '지급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, 피고에게 원고의 일순☆☆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잔액 108,545,745원(= 공급한 총액 203,589,534원 - 피고가 지급한 금액 95,043,789원)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.

반면 피고는, 일순☆☆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물품대금의 일부를 직불처리하여 주었을 뿐 지급보증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룬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, 피고가 원고에게 8회에 걸쳐 일순☆☆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95,043,789원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원고는 피고가 계속하여 일순☆☆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으로 믿고 계속적으로 일순☆☆에게 자재를 공급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와서 피고가 일순☆☆의 물품대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(1)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보증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

그러므로 먼저,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보증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(양♥罍의 인증서)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양♥罍의 증언은 양♥罍이 원고의 직원인 점,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 직원과 전화통화하는 것을 통하여 위

약정내용을 들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, 을 제4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직접 거래한 피고의 하청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의 하청업체들이 거래를 할 때에 항상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.

또한 당심 증인 윤♠○의 서면증언의 일부 내용도 피고의 지급보증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만, 위와 같은 지급보증약정을 할 때 원고는 현장에 없었고, 피고의 직원인 김♥◆과 윤♠○만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윤♠○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보증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
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일♣☆☆의 물품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여 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지만,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5,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♥◆의 증언에 의하면, 피고가 원고에게 일♣☆☆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경우에는 일♣☆☆으로부터 직불처리동의를 받은 사실도 인정되는 바, 피고가 원고에게 일♣☆☆의 물품대금 일부를 직접 지불하여 주었다는 점만으로는 일♣☆☆의 동의를 없는 경우에도 항상 원고의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보증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보증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.

(2)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

피고가 일♣☆☆의 직불처리동의를 받고 원고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, 위와 같이 피고가 일♣☆☆의 동의를 받고 일♣☆☆의 물품대금을 직접 지불하여 주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♣☆☆의 동

의가 없는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일순☆☆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윤성원 _____

 판사 장정희 _____

 판사 위인규 _____